



“사료 위생·안전성 강화가 미래를 준비하는 길”

농림부 주최 사료 품질 및 위생·안전성 교육 성료

>>> [취재 _ 오세진]

사료업계 최대 이슈인 사료의 품질 강화 및 위생·안전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열려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.

농림부 주최,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교육은 11월2일~3일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농림부 및 각 시·도, 사료업체 관계자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.

이번 교육에서는 사료 안전성 관리 정책 및 국내의 사료안전성 관리제도의 현황과 과제, 사료 공장 HACCP 심사 및 주요 지적사항 등 주요 정책 및 과제가 논의됐다.

이와함께 효율적인 사료검정을 통한 사료의 안전성 확보방안, 사료첨가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관리, HACCP 배합사료공장 시스템 구축 등 각 업체에서 숙지, 실천해야할 사항 등을 점검했다.

우선 첫날 교육에서 농림부 축산물 위생과 이

상수 서기관이 강사로 나서 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림부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일련의 시책 등을 소개하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HACCP 인증 확대, 사료관리법령 개정, 사료원가 및 축산물 생산비 절감 등에 대해 설명했다.

이 서기관은 “농가들이 곰팡이독소(아플라톡신)를 유해사료의 범위에 적용, 관리해 달라고 한 것을 적극 반영키로 했으며 열처리기준을 정해달라는 요구를 사료공정서에 반영했다”며 “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을 금년 안으로 개정할 예정이며 수급 안정보다는 안전성 관리에 중점을 두는 등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두 번째 연사로 나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병임 과장은 효율적인 사료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“사료검정 업무는 본검은 18일 이내, 재검사는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”고 거듭 강

조했다.

향후 시험연구소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“사료 검사의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국가기관은 중금속, 농약, 잔류동물용의약품, BSE 검사 등 위생 및 안전성 항목 위주로 검정을 실시할 것”이라며 “사료검사기관 및 검정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”고 설명했다.

(사)한국사료협회 사료기술연구소 박장희 소장은 ‘국내의 사료안전성 관리제도의 현황과 과제’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유해잔류물질 관리 및 미국과 일본, EU 각각의 사료안전성 관리 제도를 비교해 소개했다.

이와함께 동물용의약품 잔류문제 개선을 위해 사양농가의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수칙 준수 제도화, 출하용휴약사료 급이 의무화 및 추적관리 시스템의 제도화, 내성균 출현의 개연성이 있는 항생제 사용 제한, 대체제 개발과 무항생제 사양 체계 확립, ‘미검출’ 기준은 고시된 표준분석법의 정량검출한계로 판단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.

이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손성완 과장은 항생제의 배합사료 오염원인으로 작업자 실수, 제조공정상 잘못, 사료배합기, 수송차량의 오염과 농장에서 자가배합사료 제조시 배합 잘못, 사료 혼합기, 오염된 사료취급 도구 등을 지적하는 등 사료첨가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 관리에 대해 강연했다.

둘째날에는 OTNC의 김영옥 대표가 강사로 나서 HACCP 시스템 구축 단계 및 기준서의 구성, 위해요소의 분석 및 살모넬라 관리, 아플라



▲ 이상수 서기관

톡신 및 독소관리, 동물용의약품 관리 등에 대해 설명했다.

이와함께 저장·이송·정선·배합·가공·포장 설비 및 수송 장비 등 HACCP의 배합사료공장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요소들을 사례 중심으로 강연했다.

마지막 강사로 나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의 이광희 박사는 HACCP 심사시 주요 지적사항으로 “환경오염과 관련, 차량소독기 하수처리시설 보완이 필요하고 부원료 창고 내 개방된 배수시설에 대한 하수도매물 및 맨홀 설치 필요하며 빗물누수로 원료, 제품오염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
특히 이 박사는 “사료공장 HACCP 적용효과는 배합사료공장에 국한되지 않고 양축농가의 위생 인식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공급원에 대한 기록의 보관 및 정기적인 서면화 스펙 요구로 원료수입국이나 원료 생산 공급업체에 의해 관리의 필요성을 갖도록 하는 효과를 나타냈다”고 말했다. ㉞